

민선 8기, 시민의 삶과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에

꼭 필요한 **8가지** 핵심정책

2022.5.9.

광주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정책발굴위원회(위원장 조진상)

1. 선정 배경

- 우리의 도시는 기후위기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기온상승,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해 도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도시의 기후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생태적 복원과 탄소배출 저감, 기후적응 전략이 필요하다.
- 도시의 개발은 난개발, 기업의 수익이 우선되는 개발사업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적·환경적 사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적 예산의 투입과 저예산을 통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 모두가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도시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도시에 서 환경정책과 환경복지서비스에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 밀착형 공공서비스, 주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 민선 8기는 시민의 삶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6.1 지방선거의 정책공약은 지금 당장 실천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정책발굴위원회에서는 지역내에서 사회적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실현되지 못한 정책(옛 광주읍성 지역의 보행전용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만들기),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상¹⁾이 반영되는 정책(원도심 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걷고 싶은 숲길 확장), 시민의 재생에너지 생산참여 확대와 이를 통해 도시의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이 연계되는 정책(10만 재생에너지가구만들기- 햇빛금융상품을 통한 지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관리·도시개발 정책(광주공항 이전적지 100만평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도시의 생태적 건강성(동계천 복원)을 회복하는 정책 등을 선정하였다.
- 특히 타 도시에서 이미 실행한 사례로 효과가 검증된 정책(광주선(광주역~광주송정역) 도심철도부지 푸른길 조성)과 소규모 예산을 통해 기후환경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정책(마을마다 환경센터- 102개의 환경센터만들기)과 환경실천을 통해 모범 사례를 만드는 정책(플라스틱 30%줄이기로 1회용품 없는 광주로)을 선정하였다.

1) 2021년 5월 시민총회에서 '걷고 싶은 도시, 광주'의제가 결정되었다. 이후 시민인식조사 결과, 광주시민 95.8%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원했다.

2. 지방선거 정책의 방향성

- 지역성 : 광주의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적 여건(역사, 자치분권, 거버넌스)과 특성을 기초로 정책을 추진하여 개성있는 도시자원으로 육성한다.
- 공공성 : 환경보전과 함께 도시기능 및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환경정책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한다.
- 전체성과 복합성 :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묶어 공간특성에 맞춰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을 의도한다. 보여주기와 소모성 사업이 아닌 도시의 물적, 사회적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유성 : 도시환경만들기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활의식과 가치관이 기반이 되며, 시민문화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시민참여와 파트너십 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다양성 : 환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시민의 식 고양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시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나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 일상성 : 도시적 규모 뿐 아니라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공간에서의 거점과 작은 공간을 중시한다.
- 장기성 : 기존 정책 중 바람직하고 연속성이 요구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3. 8가지 정책

- 옛 광주읍성 지역을 보행전용지구,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만들자
- 도시녹지와 생활SOC의 접목- 광주선(광주역~광주송정역) 도심철도부지 푸른길 조성
- 원도심 재생과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는 '동계천 복개하천 복원'
- 원도심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걸고 싶은 숲길 확장'
- 10만 재생에너지 가구 만들기- 햇빛금융상품을 통해 개인/소규모 태양광 발전 확대
- '플라스틱 30% 줄이기'로 1회용품 없는 광주로
- 마을마다 환경센터- 102개 환경센터 만들기-96개 마을마다 환경센터, 5개의 구별 환경센터, 1개의 광역환경센터
- 광주공항 이전적지 100만평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

광주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 정책발굴위원회

- 위원장 : 조진상(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동신대 교수)
- 김종일(광주전남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 조동범(전남대 조경학과 교수)
- 윤희철(광주공공정책플랫폼 이사)
- 김상싱(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 정민성(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연구원)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김종필(광주환경연합 생태도시국장)
- 정은정(광주환경연합 기후에너지국장)

1. 배경 및 목적

- 옛 광주읍성 내외는 전통적인 구도심으로 근현대 시기 광주 발전의 핵심 축이었으나 전남도청 이전 이후 쇠락을 거듭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으로 재활성화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여전히 지역 활력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금남로를 중심으로 차없는 거리 행사가 2000년대 이후 상시적으로 생기기 시작했고, 민선 6기 프린지 페스티벌의 시작과 함께 자동차 중심의 도로가 사람 중심의 도로로 변화하는 계기와 함께 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됨
- 2000년 보행환경 조례가 제정된 후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충장로의 차량 통행 제한, 금남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제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었으나 정책 의지가 부족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
- 최근 서울,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고, 자동차가 단순히 지나가는 도로에서 사람들이 걷는 거리를 조성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선을 줄이고 인도의 확장 또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등의 도로 다이어트(diet)를 통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조성해 사람 중심의 도시 만들기를 구현하고 있음
- 따라서 옛 광주읍성에 보행전용지구를 구현하고, 금남로를 대상으로 도로 다이어트와 함께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광주 최초로 적용해 누구나 걸으면서 통일신라 시대 9주 5소경 중 무진주와 옛 광주읍성의 과거 흔적, 518 민주화운동의 사적지, 현재의 거리 문화가 함께 어울어져 누구나 걷고 누리고 싶은 도시 공간을 구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만나는 거리의 역사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향유의 시대를 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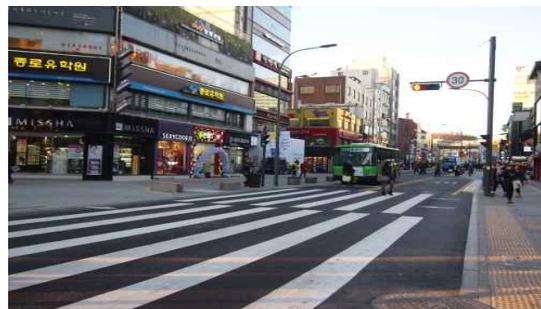
2. 주요 내용



사업 구상도

1) 옛 광주읍성 내 보행전용지구 조성

- 충장로와 금남로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주제별 특화거리 운영 등 공간을 조성하고 편하게 걷고, 쉴 수 있는 장소로서 각종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문화행사 참여를 높이고, 자동차 중심의 생활 패러다임 전환 계기 마련



연세로 차없는 거리 사례

- 보행전용지구 지정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시범사업 실시

- 보도 및 보행관련 시설물을 정비하고 문화예술 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 가로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여 축제나 행사 개최의 공간, 지역 주민 간의 교류, 방문자를 위한 쉼터 공간으로 활용

2) 금남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위해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 : 승용차를 포함한 일반 차량의 통과교통용 진입을 금지시키고 노면전차, 경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보행자의 보행활동만 허용된 지구 설치 (구역내 주차장 진입용 및 화물 선하적용 차량 통행은 제한적으로 허용)
- 버스전용 신호, 직진차로, 버스전용 좌회전차로 등 대중교통 우선 정책 적극 추진
- 금남로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을 통해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켜 거리 활성화에 기여



서울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례

3. 추진방안

- 옛 광주읍성 내 보행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방안
 - 일반시민, 상인, 지역 기관 및 단체 등 관계자 간 협의체 구성
 - 차량 진입 및 이동 억제를 위한 시범 구간 조성 및 타당성 검토
 - 시민 의견수렴 및 필요 인프라 구성
 - 보행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금남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방안
 - 대중교통 차량 외에 승용차, 승합차 진입은 상가 이용차량은 허용하고, 통과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 마련
 - 일반시민, 상인 및 건물주, 지역 기관 등 단체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서울, 대구, 부산 등 사례에 대한 공유,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불편 최소화 및 지역 활성화에 대한 방향 논의
 - 금남로 지하상가 상권활성화 위한 물리적 시설 (광장내 오픈형 지하 연결로 설치 등) 및 프로그램 지원 방안 강구

1. 배경 및 목적

- 도시를 관통하는 철도로 시민 재산권 제약, 소음과 교통 문제, 도시경관 저해 등 시민의 삶을 질 악화, 도시발전의 걸림돌
- 도심철도 이설사업의 1단계(광주역~남광주역~효천역, 10.8km) 완료 후 철도 폐선부지는 푸른길공원으로 조성, 하루 3만여명의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음.
- 광주역과 광주선 주변 공간의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광주선 철도부지를 푸른길로 조성

2. 주요 내용

1) 광주선 지하화 혹은 광주역 이전 검토

- 도심구간의 철도 지하화를 통해 광주송정~광주역 주변의 토지이용 효율화 방안 수립(순천, 부산 용역 완료, 대구, 대전 진행중)
- 타 대도시의 도심철도 지하화요구 대전-경부선 13km와 호남선 11km 지하화, 대구- 경부선 도심 통과 구간 14.6km 지하화, 부산- 경부선 철도 구포-사상-부산진역 16.5km 구간을 선로 폐쇄와 대체 지하화 노선 요구, 순천-경전선 도심통과 구간 지하화요구
- 광주역 이전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검토되어온 내용임, 광주역 주변 활성화 및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방안 등에 기 연구, 검토된 광주역 이전 방안에 대한 재검토 진행

2) 광주역 및 광주선 지상 부지 복합 개발

- 철도가 관통하는 원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과 문화, 상업기능을 갖춘 복합 개발 진행
- 지상공간은 선형 공원으로 활용하고, 일부 폭이 넓은 공간에 공공 도서관,

공공 어린이집, 공공문화센터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

○거점 공간별로 상업시설 설치를 통해 공간 활성화

3. 추진방안

- 도심철도 지하화를 위한 행정 담당부서 마련- 보다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지하화를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 마련
- 2040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 공원녹지, 교통부문 기본계획에 반영
- 시민,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행정의 제2의 푸른길 만들기 거버넌스 구축
- 거버넌스 통해 달빛내륙철도 통과 노선 대안 검토, 고속철도 지하화시 철도부지와 인근 간선도로에 대한 철도 지하화 기본구상 마련, 철도부지 대상 푸른길 조성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구간에 따라 고속철도·도시철도의 공존·병행 방안 마련 등 대안 검토

1. 배경 및 목적

- 광주천 본류의 양동상가 구간과 용봉천, 서방천, 경양지천, 극락지천, 동계천, 소태천 등 지류하천이 도시화 과정에서 복개됨
- 복개하천은 폐천 조치되어 광주천과 영산강의 수질오염 심화, 무등산에서 광주천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의 단절, 통수단면 감소에 따른 홍수 소통의 저해, 도심의 사막화에 따른 열섬현상 심화 등의 원인으로 지적됨
 - ※ 광주 제1순환도로 내부에는 저수지나 호소가 전무하며, 수변공간은 광주천 본류, 서방천 하류의 미복개 구간 밖에 없음
- 동계천은 무등산에서 발원해 구도심을 관류하여 양동 복개상가에서 광주천으로 합류하며, 유역면적은 8.50km² 하천연장은 5.54km임
- 1965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계천 복개안이 의결된 후, 1982년에 계림동에서 대인동 340m 구간을 최초 복개하였고, 1997년까지 지산유원지에서 광주천 합류지점까지 거의 전구간의 복개가 이루어짐
-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지상주의 시대의 산물이었던 복개하천의 복원이 시대의 요청임
- 동계천은 구도심을 관류하며 푸른길, 동명동, 아시아문화전당, 대인시장 등의 자원과 연계성이 우수하고 인근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어 관련사업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 동계천은 광주 도심 복개하천 복원에 관한 연구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앞섬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2007, 문화경관·생태환경보전지구 조성전략 정책연구)
- 광주시에서도 동계천 일원을 구도심 도시회복지구로 설정하고 생태축 복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구상을 마련한 바 있음(전남여고 뒤편 220m 일부 구간 우선 복원)



▶ 동계천 구간

2. 주요 내용

- 동계천 전구간의 생태복원을 목표로 단계별·구간별 복원 구상, 수질개선 및 유지수량 확보, 친수공간 조성, 교통 대책, 유지 및 운영, 자원 확보 등을 포함하는 복원계획 수립
- 동계천 복원을 통해 생태축 연결, 수질개선, 열섬현상 완화, 친수공간 확보, 구도심의 재생, 문화관광 명소화 등의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상
- 동계천 복원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상인, 사업체, 자치단체, 의회,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관협력의 모델 사례화

3. 추진방안

- 동계천 복원 민관 거버넌스 구축

- 광주시, 자치구, 의회, 지역주민, 상인, 사업체,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사업의 기획 및 추진
- 동계천 복원 마스터플랜 수립
 - 단계별·구간별 복원, 수질개선 및 유지수량 확보, 친수공간 조성 및 문화관광 명소화, 교통 대책, 유지 및 운영, 자원 확보 등 포함
- 관련 사업의 통합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서간 협업 시스템 강화
 - 생태하천 복원, 물순환 회복, 기후위기 대응,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 도시교통(교통분산, 자전거도로, 보행 등), 도시관광 명소화 등 연계 추진
- 동계천 인근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와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통해 수변·녹지공간 확충
- 민간단체,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생태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동계천 복원에 관한 시민의식 증진
- 동계천 복원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타 복개하천의 복원으로 확산

1. 배경 및 목적

-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해결되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조성면적 증가가 예상되지만 1차 순환도로 내부 원도심 지역의 공원공급은 정체되어 있으며, 도시공간구조상 공원복지 형평성에서 불균형이 초래될 것임
- 한편, 이 지역은 구도심 노후주거지역이 밀집하여 다수의 주택재개발과 도시정비사업 등이 진행되거나 계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구증가와 도시환경의 고밀화가 충분히 예상됨
- 광주시민 전체적으로는 도시내 이동수단 1순위가 자가용 승용차인 반면 구도심의 동구, 서구, 남구 주민은 이동수단으로서 대중교통을 1순위로 들고 있다는 최근 조사결과(걷고싶은 도시 광주 관련 시민여론조사, 2021)는 구도심에 가까운 좁은 생활권 규모나 세대간의 교통수단 계층화를 반영하는 사회공간적 특성과 인구구성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한편 이 지역은 보행환경만족도도 낮게 나타나 보행수요가 높으면서도 걷거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보여주어, 이러한 지역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이나 걸을 수 있는 길 조성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광주의 걷기 좋은 곳에 대한 설문에서 가장 높게 응답한 푸른길이 동구와 남구에 걸쳐있다는 점은 단지 공원이나 운동을 위한 목적만이 도시 내 이동공간 역할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원도심내 기존공원을 보행과 연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하여 걷기 좋으며 공원이 연결되는 도시환경 정비 방향이 수립되어야 하며, 원도심에 가까운 노후지역 도시개발사업시 통합적인 보행환경개선 목표를 바탕으로 공원녹지 추가확보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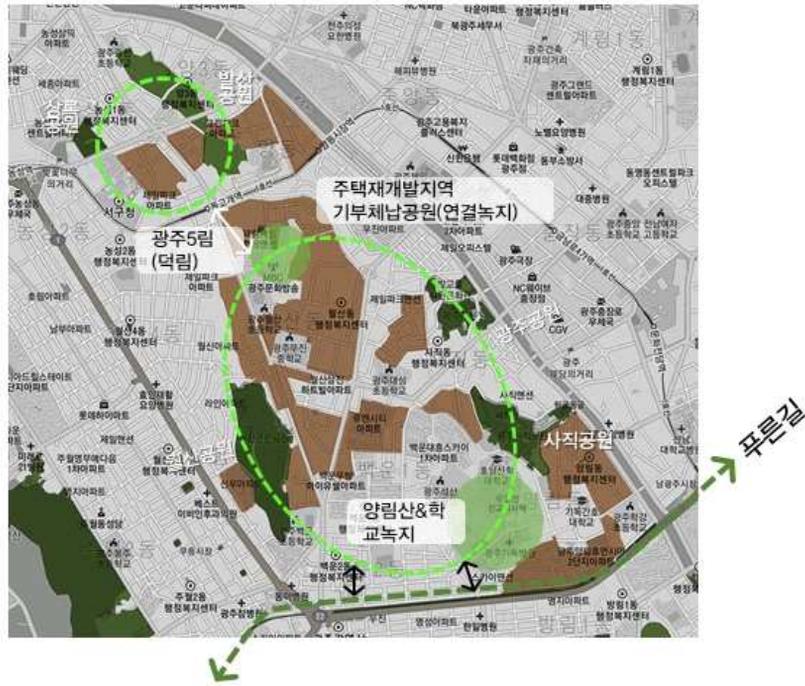


순환도로 내부 광주천 서측의 도시정비지역 분포와 공원녹지. 단절된 공원녹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적으로 개별정비구역을 통합해 새로운 연결체계를 구상하여야 한다

2. 주요 내용

1) 원도심의 공원 잇기(원도심 GREEN-O 사업)

- 도심의 오래된 사직공원-광주공원-발산공원-월산공원을 이어 도심의 녹지량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구축
- 광주천과 도심의 공원녹지를 근거로 서식하는 도시내 생물서식환경 유지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해 도시생태 제고
- 주거환경정비 및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시 (기부체납형)공원에 공공녹지(가로녹지, 경관녹지 등) 정비를 전략적으로 더해 원도심의 기존공원들이 최대한 연결되면서 이러한 통로가 공공시설(문화시설, 주차공간 등)과 연계되도록 하여 기반구조(인프라스트럭처)로서 역할을 하도록 함



2) 도시정원 및 도시숲 사업과 연계

- 마을내 자투리공간을 마을숲과 마을정원, 마을식물원 등으로 조성하여 공유공간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만족도 제고
- 광주시에서 추진해왔던 광주오림 복원사업과 연계하고 지역내의 대형수목이나 노거수를 중심으로 소공원 확대조성



주요교차로 및 가로녹지를 재정비하고 걷기좋은 길로 조성하여 도로복사열 감소 및 바람길형성 (월산교차로 사례)

3) 푸른길과 원도심 환상녹지를 연계

- 푸른길 대남로구간과 이어지는 양림산, 수피아여고간 녹지연결 및 백운광장 일대 주거지역으로부터 푸른길로의 녹색통로 정비
- 푸른길 백운광장 구간-월산공원-발산공원-광주천으로 이어지는 녹지네트워크 구축

3. 추진방안

- 원도심지역 녹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괄건축가 및 공원-도시개발-도시재생 협의기구, 거버넌스 조직(초록도시 거버넌스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
- 지역의 주민공동체와 마을만들기를 통해 공원확보.연결을 위한 지역의제 수립과 지역단위의 소규모 사업 추진을 통해 장단기형으로 동시 추진
- 1주기 민선기간에 그치지 않고 10년 이상 추진이 필요

1. 배경 및 목적

- 광주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5.5%이며 재생에너지 비율은 더 낮음. 광주시의 가구수는 약 60만가구(2020년 기준), 상가건물은 32,761동(2020년 기준)임
-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 토대 마련을 위해 배란다태양광, 주택태양광, 에너지 전환 마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1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설정
- 정부지원의 태양광발전 설치비 지원 수량과 예산지원은 조기에 마감되어 보급률 확대의 한계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정부지원, 지자체 지원 외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금융 상품이 필요함.
 - *동작신탁에서 2017년, 2018년에 걸쳐 솔라론 상품의 경우, 시민들은 대출 상품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고 금융권에서는 이자를 통해 에너지복지기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음.
- 햇빛발전협동조합 전용 대출+투자 상품 마련하여 유휴지 태양광 발전소를 확산, 자가용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

2.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 보급 - 획기적인 태양광, 태양열 확대

- 배란다 태양광 5만가구(연간1만가구) 및 주택형 신·재생에너지 2만 가구(연간4,000가구) 보급
- 상가건물 1만동 재생에너지 공급(연간2,000동)
- 주민참여에너지발전소 100개 구축

2) 마을에너지저장소 구축 -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운동을 위한 저장소 구축

- 마을 단위 거점 재생에너지저장소 100개 구축

3) 지역에너지독립총괄센터 - 광주에너지공사 산하 지역에너지독립시스템 운영관리조직

- 광주에너지공사(신설) 산하 지역에너지독립총괄센터 -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지원, 안전한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광주형 우리집/우리가게 햇빛 대출·보험

-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용자+인센티브’형 금융 상품 출시하여 태양광 보급 촉진
- 시-은행 협약 통해 발전설비 담보 설치비 전액 용자 등 시가 주도적으로 상품 조건 설계 및 추진(아낀 전기요금 수준으로 상환 설정, 수요자가 세입자일 경우 옥상 사용을 시가 보증 등)
- 설치 이후 수요 감축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촉진(예측 저감량 대비 추가 수요 저감 시 대출 이자율 면제 등)
- 태양광 발전 시간 및 피크 시간 활용 교육 등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 보급 및 확산
- 가정/상업 시설에서 태양광 설치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상쇄하는 보험 상품 출시
- 자가용 태양광 보급 수준의 전폭적 향상: 2025년까지 자가용(우리집/우리가게) 태양광 100MW 달성

6)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단위 지원을 위한 광주형 햇빛 금융

- 광주 내 햇빛발전협동조합 대상 발전소 건설을 위한 대출/보증 지원
- 투자자와 협동조합 연결 플랫폼 마련

3. 추진방안

- 매년 기후대응기금 100억원을 햇빛 금융의 기반 자금으로 활용

- 광주시, 지역 은행, 수요자(시민 RE100 클럽 등)가 함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소액대출 상품 설계
- 상품의 실현을 위한 시 역할 적극 수행: 기반기금 지원, 보증 등
- 자가용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수요를 충족시킬 보급 속도 향상 (2025년까지 100MW) 및 이를 위한 금융조달 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함

1. 배경 및 목적

- 2022년 시행 정책 : 4월 1일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6월 10일 1회용 컵 보증금제도, 11월 24일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 규제 등 시행
- 광주광역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코로나 감염증을 이유로 유예되었다가 2022년 2월부터 시행됨. 그러나 여전히 강제성이 없음
- 광주광역시 ‘코로나19 전후 재활용품 공공부문 발생량’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3.3톤/일에서 2020년 98.5톤/일로 총 18.2%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플라스틱류는 26.3톤/일에서 36.0톤/일로 무려 36.8% 증가함.
-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현재 54%)로 상향시키는 계획을 발표. 광주는 민선 8기인 2026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30% 감량으로 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환경선도도시 광주, 1회용품 없는 광주를 만들기를 제안함.

2. 주요 내용

1) 1회용품 없는 광주 만들기(장례식장, 공공기관)

- 전체 1회용기 사용량에 20%에 달하는 장례식장 1회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 다회용기 대여, 수거·세척 업체 육성으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행사·축제, 공공배달 앱 등 연계

2) NO플라스틱 및 쓰레기 감량 문화를 만드는 마을별 자원순환센터 운영

- 플라스틱 과대포장 개선 기업, 자원순환 가게, 소분샵 지원

○ 마을 단위 자원순환 거점공간 운영 통해 자원순환 문화 확산

- 재사용 및 공유 문화 확산 : 물물 교환, 중고용품 판매 및 기부, 공유 자원 (우산, 자전거, 책, 공구, 냉장고 등)
- 재활용 자원 회수 : 소형가전 수리지원, 종이팩, 투명페트, 플라스틱 병뚜껑, 커피박, 실리콘, 폐가전 등
- 교육 및 체험 기능 : 어린이 대상 자원순환 교육, 주민 대상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워크숍 및 공동체 가드닝, 수리수선 교육(옷/자전거/가전제품 등)
- 리필(소분) 판매 : 샴푸, 세제, 잡곡, 식자재 등, 빈용기 살균, 리필용 빈용기 회수, 제로웨이스트 물품 판매

3) 생활쓰레기 처리 시스템 개선

-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공공선별장을 확충하여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율 증대하고, 지역재활용 업체 적정처리 기반 마련
- 쓰레기투기 취약지구 대상 거점배출 확대, 폐지수집 고령자 연계 수집서비스 등 효율적인 쓰레기 회수·처리 시스템 도입
- 광주광역시 폐기물 종합정책 설정 및 데이터관리와 매년 성과평가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운영하여 전문성과 책임감 강화

3. 추진방안

- 플라스틱 폐기물 30% 감량조례를 제정하고,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공공기관 행사·축제 운영 등 구체적인 1회용품 사용감량정책 시행
- 생활 속 자원순환문화 조성을 위한 마을 단위 자원순환 거점 공간 마련으로 재사용, 재활용, 공유 문화를 확산
- 자원순환 전담기관 설립으로 관련 연구와 데이터관리, 쓰레기 감량 리빙랩, 교육 등을 전담하고, 전문성과 책임감 강화

1. 배경 및 목적

- 마을환경교육센터(경기 시흥시), 우리마을회수센터(대구 달서구), 중량천환경센터 등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의 환경인식을 제고하고 환경실천을 이끄는 다양한 주제의 마을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등 마을과 자치구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을 거점으로 한 환경교육활동가, 마을환경개선활동, 기후환경위기 대응활동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음.
- 시민들이 쉽게 환경관련 정보를 얻고, 실천을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운영하고, 마을과 지역,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광주시와 자치구 차원에서 마을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전국적으로 광역시·도별 업사이클링 센터, 재활용센터, 생태환경교육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 환경보건센터 등 생활환경과 지구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광주는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환경교육센터가 없는 지역임. 환경교육뿐 아니라 탄소중립, 도시숲 등의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주제별 광역센터, 자치구센터, 마을환경센터 설치가 필요함.

2. 주요 내용

1) 96개의 마을 환경센터- 기존 마을커뮤니티공간과 접목

- 커뮤니티공간(도시재생사업 조성), 사랑채(동구 동별 주민 공간조성) 등 자치구 예산이나 국비 지원을 통해 만든 주민커뮤니티 공간의 복합적 활용
- 에너지전환마을, 자원순환마을, 생태마을, 환경교육마을, 녹색교통마을 등 마을마다 특색있는 환경주제를 선택하여 마을내 커뮤니티 거점이자 기후위기,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마을환경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 누구나 정보를 제공받고 실천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

2) 5개 가치구별 환경센터

- 마을환경센터를 지원하는 구별 거점공간으로 특색있는 환경센터 조성 및 운영
- 마을환경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
- 주민들의 역량강화, 네트워크 등의 기후,환경에 대한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 지원

3) 광역환경센터- 도시숲센터,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국제기후환경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구별 환경센터와 마을환경센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활동을 지원
- 도시숲지원센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센터(광주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설치 및 운영

3. 추진방안

- 마을단위의 커뮤니티공간에 기후환경 주제를 접목한 특색있는 환경센터로 운영
- 자치구의 환경센터 설치 조례 제정 및 자치구환경센터 운영
- 도시숲, 환경교육,탄소중립지원센터 등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광역 도시숲센터,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1. 배경 및 목적

- 광주공항 이전적지 약 250만평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
- 공항 이전 부지의 개발은 주거와 함께 상업·업무, 미래산업, 위락, 자연휴식 기능이 융복합된 도시개발 방향 설정
- 광주군공항은 영산강과 황룡강 합류지점의 배후습지상에 위치했으며, 공항 조성 과정에서 광활한 하천부지가 편입되고 구하도 습지도 훼손되었음
-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지점의 부지 특성상 하천습지보호기능을 포함한 자연녹지나 공원 비중을 50% 이상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
- 100만평 광주시민대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
- 도시의 부족한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에 대한 공원녹지 제공을 원활하게 할 취지로, 도시공원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포함하여 국가가 직접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6년 3월 개정)과 시행령 마련

2. 주요 내용

- 광주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시 구 하천부지의 복원- 대규모 수변공원 및 습지 조성
- 하천부지 면적에 상응하는 토지는 중앙정부가 광주시에 무상 양여
- 무상 양여된 종전 하천부지를 포함해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수변공원 및 하천습지생태공원을 조성

3. 추진방안

- 광주공항 이전적지 도시개발 기본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
- 정부차원의 광주공항 이전 대책 마련시 공항 이전 적지 활용방향 설정과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TF팀 병행 운영

- TF팀 운영시 100만평 국가도시공원 조성방안 적극 반영